

# 이동노동자 안전한 노동환경 만든다

노동부 일터개선사업 공모 선정  
배달라이더 등 휴식권 보장 지원  
공공쉼터·힐링 프로그램 등 운영  
구의회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광주시 광산구가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1인 가구 증가로 '플랫폼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이동노동자의 권익과 안전한 일터 정착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륜차를 사용하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업종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광산구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에 구비를 보태 올해부터 이동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동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교통안전 등 맞춤형 교육과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라이더'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안전교육 강사단'도 양성한다.

이동노동자들이 '교통안전지도자'가 돼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배우며 실천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취지다.

특히 시간에 마음 놓고 편안히 쉴 수 있는 '휴게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지원한다.

현재 광산구에는 총 8곳의 '이동노동자 공공쉼터'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광산구는 공공쉼터와 함께 지역 내 편의점 및 커피숍 등을 활용해 접근이 용이하고 만족도 높은 휴식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동노동자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배달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광산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광산구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도 준비 중이다.

광산구는 이동노동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이동노동자 인권보호와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배달이 시민 일상의 '필수'가 됐음에도 여전히 이동노동자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며, 쉴 때는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 '공공갈등 해결' 시민전문가 육성

이해충돌 분석·협상유도  
'광산공론 푼다' 연계도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 내 다양한 공공갈등을 소통과 공감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갈등조정가' 육성에 나섰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공공갈등조정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찬반 대립, 의견 차이, 이해충돌 등과 같은 공공갈등 발생 시 쟁점을 분석하고, 이해주체 간 원활한 대화와 협상을 유도해 사회적 합의와 조정을 끌어내는 전문가다.

광산구는 최근 복잡하고 다양한 공공갈등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응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공동체의 상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갈등조정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윤영봉 기자

이에 기존 협치 퍼실리테이터(촉진자)를 포함해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기본, 심화, 고급과정 3단계로 양성교육을 추진한다.

광산구는 교육 수료생에 실제 공공갈등 현장 및 공론장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중재·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풍부한 실천 경험을 쌓고, 지속적으로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새롭게 시도하는 광산형 공론활동, '광산공론PUNDA(푼다)'와 연계해 공공갈등조정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소통과 공감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튼튼히 하고, 지역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공공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을 통해 어떠한 갈등도 상생으로 풀이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영봉 기자



광산구는 최근 구청 2층 상환실에서 '광주+광산형 통합돌봄' 8개 제공기관 및 3개 협력기관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산구 제공

## 소외·사각지대 없는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11개 기관과 업무협약

광주시 광산구가 지역 11개 기관과 사각지대 없는 '광산형 통합돌봄서비스망' 구축에 나섰다.

광산구는 최근 구청 2층 상환실에서 '광주+광산형 통합돌봄사업' 첫 출발로 8개 제공기관 및 3개 협력기관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에는 ▲광산구종합재가센터 ▲어동지역자활센터 ▲광산지역자활센터 ▲건강갑상사회

적협동조합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광산지회 ▲송광종합사회복지관 ▲하남종합사회복지관이 등 8대 제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다음달 1일 전면 시행되는 '광주+광산형 통합돌봄사업 7대 서비스(가사·식사·동행·건강·안전·주거·일시보호)'와 광산구가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약자 병원동행 '휴블런스', 방문구강·간호지원, 마을밥카페, 서비스 채움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윤영봉 기자

특히 ▲주대응에스앤티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투게더나눔문화재단 등 협력기관 3곳은 휴블런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기로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수년간 광산구가 쌓아온 노하우와 역량을 발판 삼아 우선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상생협약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산형 돌봄서비스망' 구축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영봉 기자

##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접수 내달 10일까지

광주시 광산구가 다음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23일 광산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표준지를 제외한 광산구 관내 개별지로 총 14만 9,048필지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10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광산

구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 우편, 인터넷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결정·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광산구 누리집, 광산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광산구 세무1과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영봉 기자

## 여성 1인 가구 안심홈세트 지원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광주시 광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와 법정한부모가족(모자가족)에 안심홈세트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산구 소재지를 뒀야 하며, 개인용 무선인터넷(와이파이)이 설치된 가구여야 한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가구, 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 추천자를 우선 선정하며, 자가 및 아파트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

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에게는 ▲현관문 앞 움직임 감지하고 자동 녹화해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한 '스마트초인종' ▲도어락 외 이중 잠금 안전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창문) 열람이 감지되면 연동된 스마트폰에서 경보음이 울리는 '문 열림 센서' ▲외부에서 강제로 창문을 열려고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창문 잠금장치'로 구성된 4종 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여성들의 주거 불안감이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봉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을 때릴 때
-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조사를 합니다.
-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design by 소스컴퍼니